

신복위 현장방문(1.28)시 말씀 참고자료

-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.
 - 새해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서민금융 이용자 분들, 관계기관장 및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- 최근 연이은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, 서민분들의 마음도 움츠러드신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.
 - 오늘 「채무조정 개선방안」 간담회가 서민 한분 한분의 자활·재기에 더욱 도움을 드리고, 나아가 서민금융의 溫氣를 보다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

< 추진배경 및 경과 >

- 서민금융 지원의 양대 축은 일반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·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“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(금융 접근성 제고)”하는 것과
 -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“채무조정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
- 정부는 작년 6월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」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·금리 인하,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,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,
 - 이번에는 채무자·채권자가 상생(상호 Win-Win)할 수 있도록 “채무조정 제도 개선”에 중점을 둔 “2단계 서민금융 지원 방안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□ 그간 적지 않은 현장방문을 통해서, 실직·질병·사고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,

-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한 빚을 상환하고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연과 경험을 들었습니다.

➡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항상 되뇌어 왔던 “어떻게 하면 채무조정 제도가 이러한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”라는 고민의 결과물입니다.

□ 한편, 금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금융위·금감원·금융협회·신복위를 비롯한 개별 금융회사가 합동 TF에 참여하여 장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➡ 따뜻한 마음으로 서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 써주신 관계기관장과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< 제도개선 주요내용 >

- 금번 “2단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「채무조정 제도의 개선방안」입니다.
 - 그 동안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, ②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, ③ 금융회사의 자체 워크아웃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.

* 지원실적 : (신복위) '02년 이후 127만명 / (국민행복기금) 47만명

○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‘연체의 늪’에서 빠져나와 자활·재기를 위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.

○ 그러나, 확실적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지원되지 못하고, 때로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따라서, 이번 대책은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(i)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, (ii)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, 자활·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데 있습니다.

□ 특히,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은 상환의지가 있는 분들의 성실한 채무 상환을 가능하게 하고,

○ 성실상환자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제도*를 활용하여 자활·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* 성실상환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(9개월 이상), 미소금융·햇살론(1년 이상), 소액 신용카드 발급(2년 이상)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 제공 중

❶ (신복위 워크아웃) 먼저,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실적인 원금 감면율(50%)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,

-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차등화(30~60%)하는 등 맞춤형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.

❷ (국민행복기금)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도 세무·복지 등 공공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,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신속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
❸ (금융권 워크아웃)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도 한층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- 은행·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고, 이를 토대로 감면율 등 지원폭을 결정하는 “맞춤형 지원 시스템”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소 은행권 공동으로, 대출만기 도래 전 “연체우려 고객”에게 먼저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·지원하는 “신용대출 119 프로그램”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입니다.

❹ (취약계층 배려) 마지막으로,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.

- 특히,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,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대폭 경감(90%)하는 한편,

- 신복위·국민행복기금내 ‘법률지원단’을 구성·운영하여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절차와의 연계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.

□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·저신용 서민분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< 금번 현장방문의 취지 >

- 오늘 자리는 실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의 경험,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,
 - 금번 개선방안 관련 보완사항 및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
- 바쁘신 일상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채무조정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그간 서민금융에 대해 느끼셨던 점 등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석자 논의 진행 후 마무리 말씀 (👉 뒷면 계속)

마무리 말씀

- 여러분, 정부가 가장 잘 하고,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'서민금융'입니다.
- 오늘 발표하는 「채무조정 개선방안」은 저소득·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관계기관간 원활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,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장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.
 - 특히, 신용대출 119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(Best Practice)를 공유·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,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.
- 한편,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「서민금융 생활지원법」이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(대형 대부업체 등), 공·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,
 - ➡ 저소득·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아울러,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,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·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-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걸음해주신 관계기관장 및 실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※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